

# 김희재 '63억'... 지역 국회의원 최다 재산 신고

## 국회의원 재산공개

### 광주·전남 18명 의원 모두 증가 전체 292명 평균 재산 25억원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에서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63억9343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종전 대비 7억7474만원이 늘어나 증감액도 가장 많았는데, 지역 의원 모두 급여 소득으로 인한 예적금 잔액 증가와 당해연도 후원회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6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지역 의원 18명 가운데 3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희재 의원을 비롯해 양향자(45억2878만원), 소병철(42억7606만원), 주철현(35억2239만원), 이개호(30억7373만원) 의원 등 5명이었다.

이병훈(29억9054만원), 서삼석(17억

5608만원), 이용빈(16억3068만원), 김원이(15억7842만원), 민형배(15억691만원) 의원은 10억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10억원 미만은 서동용(9억7784만원), 이형석(7억9545만원), 김승남(6억8077만원), 조오섭(4억7477만원), 신정훈(4억1029만원), 윤재갑(3억7042만원), 송갑석(3억1837만원), 윤영덕(2억2491만원) 의원 순이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김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 의원(5억4182만원), 윤재갑(4억858만원), 주철현 의원(3억9226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의 경우 작년

에 잘못 신고한 재산(-3815만원)이 그대로 기재돼 상대적으로 증가액이 컸다. 윤영덕(1840만원), 민형배(5792만원), 김승남(7835만원)을 제외한 의원 15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

국회의원(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 제외) 292명의 신고재산은 평균 25억2605만원이었다.

국회의원 신고재산 총액 기준을 규모별로 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22인(7.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4명(18.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4명(35.1%),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3명(28.0%), 50억원 이상 33명(11.1%)이다.

재산 증가자는 258명(87.2%)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4명(8.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9.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80명(60.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명(6.1%), 10억원 이상 8명(2.7%)이다.

재산 감소자는 38명(12.8%)으로, 5000만원 미만 10명(3.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명(1.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명(4.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명(0.3%), 10억원 이상 8명(2.7%)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낙연 “도쿄에서 무슨 일 있었나... 尹 정부는 밝혀라”

### SNS에 잇단 일본 측 망발 지적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독도, 역사, 국민건강 등 대한민국의 기틀에 도전하는 일본측의 망발이 잇따라 나오는가”라며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월16일 한일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두 차례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심지어 일본 내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건 또 뭔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밝혀라.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려는가. 4월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심각한 굴절을 어떻게 하려는가. 동맹 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며 “독도 외교전쟁에 임하는 태세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덕흠·성일종·이상직·윤미향 징계 심사

### 여야, 윤리특위 소위 구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윤리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내 소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1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

국회 공식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을 다루는 1소위는 박덕흠·성일종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의 건을 심사한다.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는 2소위에서는 윤미향 의원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 의원은 주시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안이 올라왔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재판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 신임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내정

조현동(사진)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전남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조차관이 내정됐다.

주재국임명 동의(아그레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임하게 된다.

조차관은 외교부내 ‘북미통’으로 꼽힌다.



한국외대 서반어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북미3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공사,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도 맡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한일 굴욕외교 규탄

### 李 “윤 대통령 수입 불가 천명” 대통령실 “국내 들어올 일 없다” 윤재갑 해수특위위원장 삭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수산단체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에서의 대화 내용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와 소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사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

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산 명개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대회의 사회를 본 양의원 의원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일본(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대화를 소상히 밝혀라”며 “일본에서의 대화는 공개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며 삭

발식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동석한 누가 후쿠시마 전 일한의원연맹회장이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법사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공방

### 여 “수사 결과 미흡하면 특검” 야 “늦어도 내달10일까지 처리”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적어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사건의 신속한 결론을 위해 서라도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지점은 명확한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 처리하고 통과시키자는 발언과

도 명백히 모순된다”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바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광산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제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소위에 넘겨 다음주까지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늦어도 4월1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심의가 지지부진해 진다면 정의당과 함께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